

현안과 과제

“포스트 김정일 체제하의 남북관계와 통일의식”
- 2012년 남북 관계 대국민 여론조사 -

Executive Summary

□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대

- 2012년 남북 관계 대국민 여론 조사 -

(설문 개요)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개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대

일반국민 1,00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모두 통일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을 하였다. 통일은 흡수통일, 무력통일 보다는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해법으로는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로 상호신뢰 회복’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합리적인 정치 외교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여전히 국민들의 통일비용 부담의향은 2010년, 2011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하였고, 통일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일(자유로운 왕래)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현 수준이거나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유화정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통일 의식)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 필요하지만 그 시기는 다소 엇갈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1,002명의 국민 중 73.7%인 절대다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의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였다. 통일 방식은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 보다는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가장 선호(62.1%)하였다.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11년 이상 걸린다’는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2011년 조사에 비해서는 ‘6~10년’의 비율이 10%p정도 증가하여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보다 낙관적 견해가 높게 나타났다.

(통일 준비 과제) 통일 비용 부담 의지 및 통일 수준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

통일 비용과 통일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소극적 의견이 많았다.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연 10만원(월 8,300원) 이하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3.7%로 비용 부담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통일수준 또한 여전히 자유로운 왕래(39.3%) 수준의 소극적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42.5%)이 가장 높았고, 방해가 되는 나라는 '중국'(67.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2000년 조사에 비해 55.2%p가 상승되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은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로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 노력'(16.9%)에 응답하면서도, '남북간 회담 및 정상회담 정례화' 및 '한반도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균형외교 강화 등 정치 외교적 부문의 접근도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대응과 전망) 전환적 대북정책이 필요하지만 2012년 남북관계는 불투명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우리정부는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79.8%)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편이었다. 국민의 51.6%는 사과가 없더라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지만, 반면 45.0%는 사과 없이는 대화를 해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견과 개방을 확대할 것 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012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66.7%)한 비중이 높았다.

1. 남북 관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I. 조사개요

- 조사시기 : 2012년 02월 1일 ~ 8일
- 조사방법 : 전화조사
- 조사대상 :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91%

II. 조사내용

1.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과제

○ 대다수의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방식으로는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원하고 있지만 통일 시기는 다소 엇갈림

○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대다수가 공감

- 전체 1,002명의 국민 중 73.7%인 절대 다수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음
-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대부분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
-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는데, 20대(62.0%), 30대(70.0%), 40대(81.1%), 50대 이상(79.1%)의 순으로 높았음

통일의 필요성	전체비율	보수	중도	진보
필요하다	73.7%	68.1%	75.8%	79.1%
필요없다	21.1%	26.6%	18.0%	16.8%
모르겠다	5.2%	5.3%	6.2%	4.0%

○ (통일 방식)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방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62.1%가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방식을 선호하였으며, '북한 붕괴 후 남한주도 흡수통일'은 34.1%, '전쟁 등의 군사적 무력 통일'은 3.8% 순으로 응답되었음

-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통일의 방식은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선호하고 있음
-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여자(64.6%) ▲50대 이상(69.0%) ▲광주·전라(73.3%) ▲무직·퇴직 계층(69.1%)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68.7%)에서 높았음

통일의 방식	전체비율	보수	중도	진보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	62.1%	57.3%	62.7%	67.8%
북한 붕괴 후 남한주도 흡수통일	34.1%	37.9%	33.7%	29.5%
전쟁 등의 군사적 무력 통일	3.8%	4.8%	3.6%	2.7%

○ (통일 가능 시기) 통일 가능시기에 대하여는 다소 엇갈린 입장

- 통일 가능 시기는 '11년 이상'이라는 의견이 47.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6~10년'이 25.1%, '불가능하다' 22.5% 수준임
- 예년에 비해 '11년 이상'은 13.1%p감소(61.0%→47.9%)했고, '6~10년'은 8.7%p 증가(16.4%→25.1%)하여 통일시기에 대해 보다 낙관적 반응을 보였음
- 하지만 여전히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응답이 전반적으로 '11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통일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우세임
- '통일이 불가능하다'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여자(27.3%) ▲50대 이상(29.6%) ▲블루칼라(34.5%)계층 ▲소득이 낮을수록 높았음

통일가능시기	2000.10	2008.11	2009.7	2010.11	2011.11	2012.2
5년 이내	4.8%	3.2%	2.5%	2.4%	2.8%	4.6%
6~10년	34.3%	12.9%	14.1%	14.6%	16.4%	25.1%
11년 이상	49.7%	61.1%	54.7%	61.6%	61.0%	47.9%
불가능하다	11.2%	22.8%	28.6%	21.4%	19.8%	22.5%

주 : 2000년 여론조사는 6.15 남북공동선언 4개월 후에, 2008년 조사는 금강산관광 중단(2008. 7. 11) 3개월 후에, 2009년 조사는 2차 핵실험(2009. 5. 25) 2개월 후에, 2010년 조사는 천안함 사건(2010. 3. 26) 6개월 후에, 2011년 조사는 북핵문제 및 천안함 사건 여파가 여전한(2011. 10) 시기에, 2012년 조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개월 후에 실시

○ 통일비용 및 통일수준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소극적 의견이 많고, 바람직한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문화교류 및 정치·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

○ (통일비용 부담)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함

- 통일비용을 연 10만원(월 8,300원) 이하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93.7%로 높아 비용 부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냄
- 특히, 통일비용의 '부담 거부'와 '연 1만원 부담'하겠다는 응답이 2009년(46.1%)에서 2010년(72.1%), 2011년(79.4%), 2012년(67.2%)로 상승세
- 이는 통일세 제안 이후 통일비용 부담의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통일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통일비용 부담	2008.11	2009.7	2010.11	2011.11	2012.2
부담하고 싶지 않다	30.4%	21.5%	37.4%	46.0%	31.6%
연 1만원 이하	24.0%	24.6%	34.7%	33.4%	35.6%
연 2~10만원 이하	35.3%	38.4%	24.6%	17.5%	26.5%
연 11~50만원 이하	10.2%	15.5%	2.7%	2.6%	4.7%
연 51만원 이상	—	—	0.5%	0.5%	1.5%

○ (통일 수준) 여전히 '자유로운 왕래'(39.3%) 수준의 점진적 통일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남북경색 장기화 현실 등으로 '적극적 통일관'보다는 '점진적 통일관'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
-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일반 국민들은 꾸준히 '자유로운 왕래' 수준의 통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통일 수준	2008.11	2009.7	2010.11	2011.11	2012.2
남북한 완전한 통일	26.9%	22.9%	23.7%	25.1%	32.9%
1국가 2체제 평화공존	13.5%	17.1%	25.0%	18.8%	16.9%
자유로운 왕래 수준	50.3%	46.5%	40.6%	44.4%	39.3%
현 상태도 괜찮다	9.4%	13.5%	10.7%	11.6%	10.9%

○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미국이 한반도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로, 중국은 통일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나라로 평가

- 미국은 도움을 줄 것 같은 나라 1위(42.5%)이며, 걸림돌이 되는 나라는 중국이 67.6%로 응답됨
-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나라 중 중국의 비율이 2000년의 12.4%에서 2012년 67.6%로 대폭 상승하였고, 이는 여전히 중국이 북한을 후원국으로써 정치·경제적으로 지원해 한반도 통일의 방해세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임

통일에 도움 되는 나라	2000.11	2012.2	통일에 걸림돌 되는 나라	2000.11	2012.2
미국	48.9%	42.5%	미국	26.1%	16.4%
중국	29.1%	29.2%	중국	12.4%	67.6%
일본	4.9%	4.0%	일본	40.0%	11.6%
러시아	6.4%	3.1%	러시아	11.7%	4.4%

○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 추진과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할 것은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로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 노력'으로 응답(16.9%)

분야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	비율
사회문화 (27.9%)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로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 노력	16.9%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인권 개선 등	11.0%
정치외교 (40.6%)	남북간 회담 및 정상회담 정례화	14.3%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균형외교 강화	12.3%
	남북 평화협정 체결	10.0%
경제 (31.4%)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	4.0%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와 통일재원 확충	12.0%
	정경분리 원칙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9.7%
	북한의 개혁·개방유도와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9.7%

- 일반국민들은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확대'로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응답하면서도, '남북간 회담 및 정상회담 정례화'(14.3%)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균형외교 강화'(12.3%) 등 정치적 부문의 접근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 반면 '대북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는 4.0%로 가장 낮게 응답되었고, 이는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음

2. 김정은 체제 등장과 남북관계 현안

○ 대다수 국민들의 대북 신뢰도는 낮아지는 추세이며, 북한 개혁개방은 현 수준이거나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대북 신뢰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으로 대북 신뢰도는 지속적 하락 추세
 -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뢰한다'는 국민은 19.9%였음
 -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직후 최고치(52.3%)를 기록했던 대북신뢰도는 점차 감소하여 이번에는 19.9%로 최저치임

북한에 대한 신뢰도	2000.6	2000.10	2000.12	2001.6	2002.5	2008.10	2009.5	2012.2
신뢰할 수 있다	52.3%	45.2%	37.0%	25.7%	34.1%	24.3%	22.2%	19.9%
신뢰할 수 없다	41.0%	52.8%	59.7%	72.9%	64.0%	75.7%	77.8%	69.4%
잘 모르겠다	6.7%	2.0%	3.3%	1.4%	2.0%	-	-	10.8%

-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현 수준'과 '개방 확대' 측면에 높은 응답
 - 김정은 체제의 향후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현 수준일 것이다'(41.1%)라는 의견과 '개방이 확대 될 것이다'(39.2%)라는 의견이 동일하게 다수를 차지하였음
 - 지속적인 북한의 경제난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은 폐쇄적으로 가기 힘들 것이라는 배경이 응답률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보수성향(43.0%)과 중도성향(44.6%)은 '현 수준일 것이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지만, 진보성향(47.7%)은 '개방이 확대 될 것이다'라고 응답

김정은 체제 개혁개방	전체비율	보수	중도	진보
개방이 확대 될 것이다	39.2%	34.7%	36.7%	47.7%
현 수준일 것이다	41.1%	43.0%	44.6%	34.9%
폐쇄적으로 될 것이다	19.8%	22.4%	18.7%	17.4%

○ **김정은 체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012년 남북관계는 여전히 현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응답**

○ (김정은 체제와 우리정부 대응) 새로 출범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우리정부는 ‘유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음

- ‘현 정책을 유지하는 것’ 보다는 ‘대화를 통한 유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79.8%로 전환적 대북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
-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대화를 통한 유화정책에 대해 진보성향의 응답이 88.3%로 보수성향 비율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남

김정은 체제와 한국정부 대응	전체비율	보수	중도	진보
대화를 통한 유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79.8%	71.1%	83.0%	88.3%
현 정책(대북강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0.2%	28.9%	17.0%	11.7%

○ (천안함·연평도 사과문제) 응답자의 절반은 북한의 사과가 없더라도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

- 응답자의 51.6%는 ‘새로운 김정은 체제가 들어왔으므로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가 없더라도 전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45.0%는 ‘새로운 지도부로 바뀌었다고 해도 천안함·연평도 사건 사과가 없다면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하였음
- 보수성향은(55.9%) 사과 없이는 대화는 안 된다고 했지만, 진보성향은(65.4%) 사과가 없더라도 전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정치성향별 차이가 분명함
- ‘전향적 관계 개선요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집단은 ▲남자(56.5%) ▲30대(55.8%) ▲화이트칼라(58.2%) ▲강원(67.7%), 제주(63.6%), 광주·전라(62.9%)

김정은 체제와 천안함·연평도 사과문제	전체비율	보수	중도	진보
사과가 없더라도 전향적으로 관계를 개선	51.6%	41.8%	51.0%	65.4%
사과가 없다면 대화해서는 안된다	45.0%	55.9%	43.5%	31.9%
잘 모르겠다	3.4%	2.3%	5.6%	2.7%

○ (2012년 남북 관계 전망) 2012년 남북관계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 (66.7%)한 비중이 높음

- 남북관계 전망은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보수(70.1%)와 중도(66.9%), 진보(62.0%) 성향 모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에 높은 비율로 응답

2012년 남북 관계 전망	전체비율	보수	중도	진보
매우 좋아질 것이다	0.6%	1.0%	0.0%	0.7%
약간 좋아질 것이다	22.7%	19.8%	21.3%	27.9%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66.7%	70.1%	66.9%	62.0%
약간 나빠질 것이다	8.9%	8.3%	9.8%	8.8%
매우 나빠질 것이다	1.1%	0.8%	2.0%	0.7%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02-2072-6221, sjhong@hri.co.kr)

이용화 선임연구위원 (02-2072-6222, yhlee@hri.co.kr)